

#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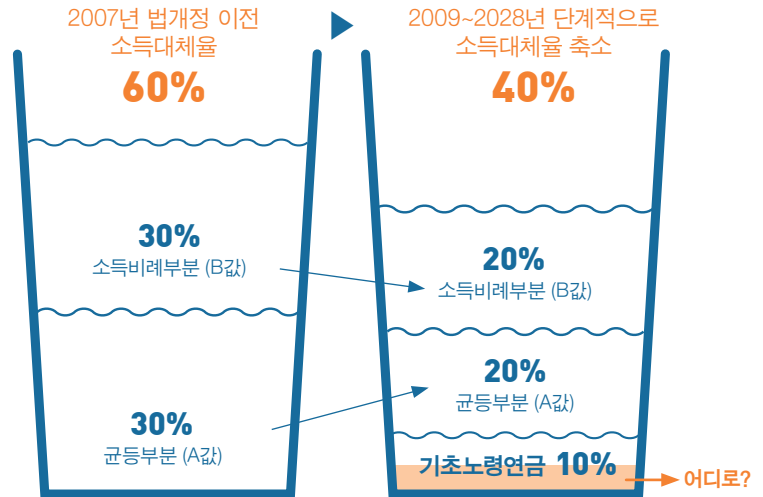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연금의 삭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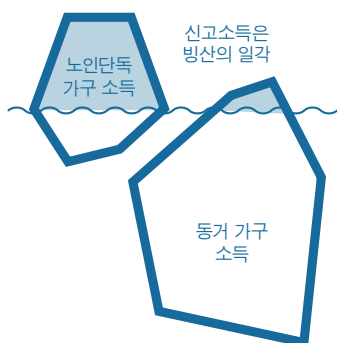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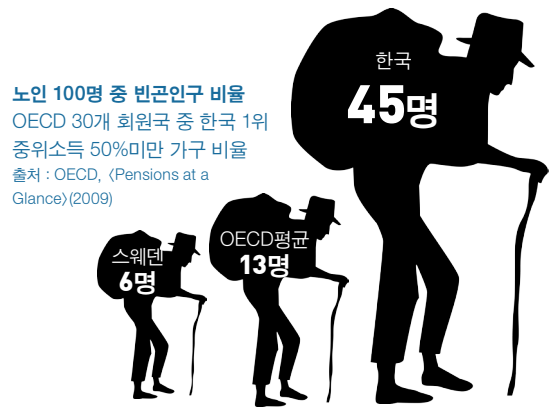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기존 노인세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A값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삭감을 보완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원래 받아야 할 공적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대비하여 노후에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의 9%를 40년 동안 보험료로 납부하면, 본인 소득의 40%(2028년부터) ~ 50%(2008년 기준)를 지급받습니다. ※A값 :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절반은 균등부분(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나머지는 자신의 평균소득액(B값,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자기 소득 평균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평균에 비해 약 3.3배에 달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84.4명으로 OECD 평균자살율의 7배가 넘고 우리나라 평균자살율의 2.5배에 달합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을 비롯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서, 실제 연금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특히 여성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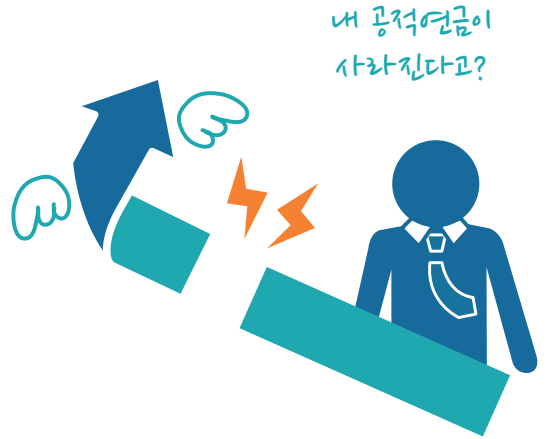


## 선별적 지급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 노인에게 대한 선별적 지급을 통해서 노인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인빈곤율이 45%에 이르는 등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선별적 지급을 하면 재산은닉, 재산조사와 평가를 위한 행정비용 등 추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하고 부자들에게는 과세와 공제를 통하여 세금으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 삭감된 공적연금,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당신은 20~40대입니까?  
당신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노후에 받는 공적 연금은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 왜 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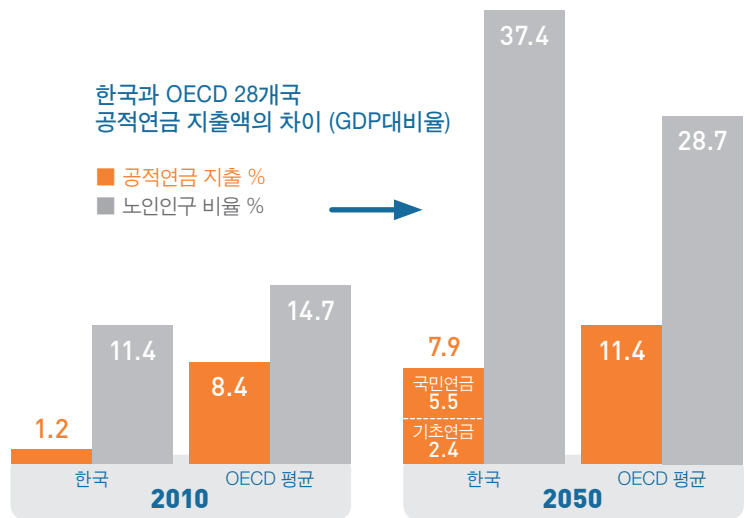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며, 법에 보장되었던 공적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대폭 인하(60%→40%, 40년 가입기준)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기존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이 25년 이하여서 국민연금 수령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 삭감은 국민 대부분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 정부가 10월 2일 발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연금액 결정기준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사실상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계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과는 달리 연금액을 물가변동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한 물가상승률은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현행 제도보다 훨씬 심각하게 후퇴된 안입니다.

##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0년에 OECD 28개국이 연금으로 GDP대비 평균 8.4%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대비 1.2%에 불과하여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37.4%에 이르는 2050년에도 공적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이 GDP대비 7.9% 정도에 불과하여 OECD 평균 공적연금 지출액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국가재정이 위협받다는 주장은 과장된 공포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그림 참조).



##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전국의 2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 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